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 특보를 내며 -

공정보도는 우리 모두의 촛불입니다
 노보/불공정보도 특보 발행, 그리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은 이성의 고단한 실천임을 확인합니다.
 제1호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모습을 되짚고 언론사로서
 국민께 신뢰를 다시 구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채택됐다고 하여 불공정의 화신이요, 안됐다고
 해서 공정의 전범이 아닙니다.
 지면의 제약과 시간적 한계가 있기에
 가장 영향력 있고 상징성 큰 소재를
 선별하여 그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독자들에게 불신을 안긴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가 조합원 총의를 모아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그 일정에 맞추어 특보 발행에 나선 것도
 그러한 판단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과 관련된 개인들이 갖게 될
 자존심의 훼손과 복잡한 심사는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할 일이 아니라 연합뉴스 공동체의 몫인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박정찬 사장 체제 아래서 그 상처가 심화됐다는 데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정보도로 향하는 큰 길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나아가 특보는 앞으로 예민한 비판을 낚설어 하는 풍토를 일신하여
 서로 개방적 태도로 논쟁하면서 소통의 영역을 넓히는 데 일조할 것임을 밝
 합니다.
 또 그것을 자양분 삼아 더 큰 성과를 일궈내는 진취적 사내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진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박정찬 “그 사람 기사 쓰지 말아달라” 고교동문 구치소 특별면회.영외치료 민원지시까지

2008년 9월18일.
 연합 법조기자는 쓸만한 기삿거리 하나를 취재했다.
 대기업 사장 C씨가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고 검찰이 이를 포착했다는 것.
 아직 기사를 쓸 만큼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기자는 일단 ‘C사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에 보고했다.(C씨는 납품회사에서 24억원을 받고 사장 연임을 위해 최대주주 회사 사장에 8천여만원을 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됨)
 보고를 한 지 약 3시간 뒤 당시 특임이사였던 박정찬 사장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 “C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슨 혐의를 받든 다 주위 사람들 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사장은 이어 “C씨가 좋은 사람이니 그 사람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프로필로 드러난 박 사장과 C씨의 관계는 대구 계성고 2년 선후배 사이다.
 해당 기자는 “백번 양보해서 기사 쓸 때 회사 고위 임원이 ‘친한 지인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이튿날인 9월19일 C씨는 체포돼 수사를 받았고 이 기자는 박 사장의 ‘기사청탁’을 무릅쓰고 기사를 송고, 포상까지 받았다.
 박 사장의 이런 기사관련 청탁은 지난 특보에서 밝혔던 ‘김승연·신정아 특종 방해’와 궤를 함께 한다. 언론사에서 특종을 막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가장 큰 해사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C씨에 대한 박 사장의 관심은 그치지 않았다.
 C씨는 구속기소돼 같은 해 10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채 재판을 받았다.
 박 사장이 연합뉴스 사장에 취임한 뒤인 2009년 초여름.
 제보에 따르면 박 사장은 C씨와 특별면회(가족이나 변호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를 지시했고 법조팀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외부 면회객이 들어갈 수 없는 안쪽 주차장까지 사장의 차가 들어가는 편까지 봐줬는데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장이 사장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수개월 뒤 C씨의 영외치료(의사의 소견을 받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민원이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C씨의 부인도 박 사장과 친분이 있는데 부인이 사장에게 영외치료를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는 언론사 사장과 관련한 민원인만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신경을 써 C씨가 교도소와 가까운 안양 시내 S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를 C씨의 집과 가까운 서울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지시가 다시 내려왔다.
 법무부 측은 “영외치료는 민간인 의사가 지정한 교도소 인근 병원으로 한정한다. 만약 강북삼성병원으로 바꾸라고 하면 의사가 거부할테고 계속 그렇게 원하면 이 의사가 인터넷에라도 올리면 연합도 법무부도 망신이다”라



며 한사코 말했다.
 결국 ‘실패’했고 해당 기자는 질책을 받았다.
 이 실패를 계기로 법조팀은 C씨와 관련된 박 사장의 원활한 지시 수행을 위해 수용시설의 총괄 책임자인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빈번히 만나야했다.(통상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법조기자가 알고 지낼 일이 거의 없다)
 2009년 10월말과 2010년 6월 별다른 계기없이 이 교정본부장을 칭송하는 장문의 인터뷰 기사가 뜬금없이 출고된 배경이기도 하다.
 박 사장은 고교후배인 C씨와 관련한 특종기사를 왜 막으려고 했는지와 구치소 면회와 영외치료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무릎꿇은 모습 안돼” 사진도 갖은 압력

박정찬 사장 재임기간 연합뉴스의 불공정·정권 편향성은 글 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진부의 사진 송고 과정에도 ‘윗선’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특종 사진을 찍고도 낙종의 치욕을 당한 경우도 있다.

글보다 사진과 영상물이 더 주목받는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3월 3일 오전 7시 국가조찬 기도회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사진부 청와대팀이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참석자들이 이 인사말을 듣는 장면,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담당 사진기자는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을 송고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다.

이 사진을 제외한 다른 사진 18장이 오전 9시41분에서 10시40분 사이에 송고됐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은 오후 2시6분에야 3건 송고됐다. 석간인 문화일보 1면에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나온 뒤였다.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글 기사도 오전 9시31분에 나간 첫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으나 오후 4시 52분 종합 기사에는 포함돼 있다.

#2010년 4월 2일 국회에서 천안함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는 도중 메모가 한 장 전달됐다.

노컷뉴스는 ‘VIP께서’로 시작하는 이 메모를 찍어 이 대통령이 김 장관의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연합뉴스 사진부 기자도 찍었으나 보도는 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사진을 찍어 회사로 전화로 보고하고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사진은 송고되지 않았다.

이 일은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등에 “연합뉴스 찍고도 낙종했다”는 취지로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 중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널리 알려진 진보정치인, 노동계 인사의 사진을 송고했다.

회사는 단말기에 올라온 사진을 보자마자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데모꾼들 얼굴 보기 싫다”라며 행사 전경 사진만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였으므로 기자는 유시민과 노회찬이 대화하는 모습 등이 진보정치계의 상황을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보낸 것

이었다.

이미 송고된 사진까지 삭제되지 않았으나 이후 취재와 송고에 미치는 심리적 압박감은 작지 않았다.

#2010년 3월 18일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2010년도 편협 부장 세미나’에서 참석했다.

그는 “언론계 선배로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선배로 남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기자는 공개된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당연히 이 장면을 찍어 송고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편집국장은 “최시중 우는 사진이 있다는데 그게 뭐야?”라며 사진부로 향했다고 한다.

편집국장은 “이렇게 우는 사진이 여러 장 나가도 되느냐”며 “최 위원장 측에 연락해 의중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최 위원장 측에서 문제없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편집국장은 “그럼 사진을 그냥 놔두라”고 했다.

#올해 1월 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거나 참석자의 말을 듣는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장을 보냈다.

조금 뒤 기자는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클로즈업 사진에서 박 위원장 표정이 이상하다. 이런 표정의 사진은 다

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왜 그런 사진을 보냈느냐. 앞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지시의 출발점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올해 1월11일 오전 11시18분 한 지역본부에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때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 전비서 고 모씨의 사진을 찍어 송고했다.

본사의 긴급 취재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사진은 송고된 뒤 본사에서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킬됐다.

해당 기자는 “고씨의 얼굴이 타사에서 이미 공개된 데다 현장에서 방송사들까지 영상촬영을 해 초상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묵살됐다.

고씨 사진은 송고되지 못했고 수사관이 탄 차량을 취재진이 둘러싼 모습 등만 송고됐다.

그러다가 2시간 반 정도 지난 오후 1시50분께 킬 했던 사진이 송고됐다.(이 사진은 4개지 12단전제)

그 이유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돈봉투 사건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장본인이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임을 고려하면 이런 핵심적인 사진의 지연송고는 통신사로서 기본을 저버린 보도행태라고 할 수 있겠다.

왜 연합뉴스 스티커를 가려야 했나

“연합 기자는 시민이 주는 커피 마실 자격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은 ‘반(反) MB’ 여론이 폭발하던 시기였다.

그만큼 ‘친(親) MB’ 매체의 대표 주자로 치부된 연합뉴스의 기자들은 취재현장에서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수모를 겪어야 했다.

다음은 당시 취재를 하던 한 초년병 연합기자의 눈물어린 고백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뒤 한 달여간 서울시청 앞 광장과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매일 추모행사가 열렸다.

나는 이 추모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추모행사가

열린 날로 기억한다. 행정안전부가 광장 한구석에 천막을 쳐 임시 기자실을 만들었다.

시민들이 취재진을 위해 커피믹스와 종이컵을 임시 기자실에 가져다 놔다. 별 생각없이 커피 한 잔을 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순간 한 시민이 내게 다가왔다. 내 노트북에 붙은 ‘연합뉴스’ 스티커를 본 듯 했다.

“어디 기자예요?”

“연합뉴스 기잡니다”

“이거 제가 기자들 마시라고 사온 거거든요. 연합뉴스는 마시지 마세요. 연합뉴스가 언론입니까?”

“아..제가 선생님이 사다놓은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마실게요”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짐을 챙겨 기자실을 떠나려고 했다.

그 시민은 나에게 “연합은 커피마실 자격도 없다”고 소리쳤다.

다른 기자들과 시민들의 눈길이 내 뒤통수에 쫓겼다.

이 일을 겪은 뒤 나는 노트북용 가방을 새로 하나 샀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은 채로 노트북 전원을 켤 수 있어 ‘연합뉴스’ 스티커를 가릴 수 있는 제품이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있을까’

자괴감을 가눌 수 없었다.』

#취재현장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났다.

주로 카메라 기자들(스틸과 영상)이 겪어야 했던 기억을 소개한다.

이들이 연합뉴스 기자라는 것을 속여야만 했던 부끄러웠던 장면이다.

『작년말 한미FTA 반대 집회시가 두시위를 촬영했을 때다. 날씨가 쌀쌀해 회사 로고가 있는 점퍼를 입고 나갔다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연합찌라시도 언론이냐”라는 욕을 많이 들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위협감도 느껴 점퍼를 벗고 카메라에 붙인 회사 스티커를 떼고 나서 촬영했다.』

『작년말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너희는 관영언론냐” “청와대 홍보지냐” “조중동연은

노무현 서거정국 기사 ‘톤다운’ 타당했나

2009년 5월23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온 것이다.

연합뉴스는 관련 기자가 전원 출근해 서거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거 첫날은 통상 기사량이 많지 않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한글 기사만 273건(통합검색 프로그램 검색 기준)이 송고됐다.

일요일인 24일 165건의 기사가 나간 데 이어 25일에는 가장 많은 292건의 기사가 송고됐다. 이후 일별 기사 건수는 26일 152건, 27일 144건, 28일 123건이었고, 영결식이 있었던 29일에는 106건이었다.

연합뉴스는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봉하마을에 24시간 교대 근무조를 배치하고 관련부서도 연일 야근하며 취재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수많은 단독기사가 나올 정도로 취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 기사는 회사 내부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사안이기도 했다. 2009년 6월19일 노조의 공정보도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이러다간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연합뉴스가 겪고 있는 공정성 위상 추락의 한 원인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 작업이 마치 당시 연합뉴스의 모든 보도가 불공정했다는 식으로 폄하되진 않기를 바란다. 취재기자들은 통신사 기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을 누볐고, 대다수 기사가 공정성 시비에는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초기 연합뉴스는 신속한 보도에 비중을 두고 기사를 쏟아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서거 첫날이 토요일이었음에도 무려 273건의 기사가 나간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시 취재기자들은 3~4일이 지나면서 ‘신속’보다는 ‘중립’이 강조됐다고 전한다. 현장 기자들에게는 찬사일색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팩트 위주의 가치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내려왔다.

당시 한 취재기자는 “초기에는 단견 위주로 기사

량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묶어쓰는 것이 좋겠다는 전달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기 일부 부서에서 작성된 기사들은 매우 일부이긴 하지만 ‘킬’(kill)되거나 다른 기사에 엮이고 종합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현장 기자 중에는 다소 의아하긴 하지만 이미 며칠 지난 상황이어서 기사의 밸류상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문제는 영결식이 진행된 29일 기사였다. 일부 기자들은 “회사에서 톤다운하라거나 드라이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영향 때문인 듯 영결식 당일 오전 봉하마을에서 나간 스케치 기사는 단 두 건이었다. 한 달 전쯤인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대검찰청에 출두할 당시 봉하마을에서 나간 스케치성 기사는 17건이었다.

한 취재기자는 “(영결식은) TV로 생중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자세히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매우 황당했다”며 “생중계 되면 기사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인지 의아했다”고 회고했다.

노조 공보위는 영결식 당일 오전 기사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자 편집국장에게 공개질의까지 했다.

당시 사측은 “적극적인 보도 자제 지시가 없었다”, “영결식 당일 오전에는 기술적 판단미스가 있었고, 기사처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은 반성해야할 점이 있다.

그러나 보도 전반에 대해 축소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2009년 6월30일 발행된 ‘공정보도’ 기사 중 일부>

2009년 6월 19일 저녁 ‘금연건물’ 연합뉴스 6층 노조사무실에서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다.

3시간을 훌쩍 넘긴 ‘마라톤 회의’는 연합뉴스의 최근 보도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데서 시작해 보도의 적절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위기감과 자성까지 나왔다. 회사의 재발방지 촉구도 빠뜨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보도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인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보도전반과 사회부가 출고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검찰 수사관련 보도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연합뉴스는 제일 먼저 서거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서울 세종 로에 있는 덕수궁 분향소에도 사회부 사건팀, 사진부, 영상뉴스부 기자들이 발빠르게 취재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생중계 사안이냐’는 회사의 지적 이후 기자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진 것으로 공보위는 진단했다.

서거 보도와 관련해 현장 기자들이 선배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은 말은 ‘톤 다운’과 ‘드라이’였다. 다른 보도에서도 가끔 들던 단어 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선배들의 말이 톤다운 되지 않은 채 시종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사건조사-조문-장례논란-영결식으로 이어진 일련의 보도에서 기사 건수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영결식 당일이 다른 날보다 적었다.

연합뉴스는 지난 5월 23일서거당일 273건을내보낸 이후 24일 165건, 25일 292건, 26일 152건, 26일 144건, 28일 123건 등을 출고 했으나 발인, 화장, 영결식 등이 이어진 날에는 106건을 송고하는데 그쳤다.

‘톤 다운’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 일각에서는 ‘기사 건수를 늘리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면의 제약이 없는 뉴스통신으로서 ‘기사가 될 만한 사안은 모두 쓴다’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된 것으로 공보위는 판단했다.

“인터넷 매체가 생중계하듯 하니 우리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 편집간부의 언급도 ‘멀티미디어 통신사’를 지향하는 연합뉴스의 모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회사가 ‘노 전 대통령 관련기사를 누그러뜨리며 북한의 핵문제를 키우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는 말도 전해졌으나 공보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관련 현장 취재에 적극 동참했던 부산, 울산, 경남, 경기 등 기자들은 “주민들(노사모나 정당 관계자 등 정치 편향적 인물이 포함됐을 가능성 있음)이 연합을 보는 시선이 무척 거칠었다. 우려스런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역적 특성상 ‘정치바람’이 거세지 않은 대전지역이나 인천지역에서도 간간히 “연합의 최근 행보가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는 전언도 있었다.

☞ 2면에 이어

찍지 마라” “이명박 하수인은 꺼져라”라는 조롱을 당했다. 일부 격앙된 참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연합뉴스의 취재에 대한 반발이 거세져 장소를 옮겨 몰래 촬영할 수 밖에 없었다. 한 참석자는 내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김해 봉하마을이었다. 연합뉴스의 로고를 본 마을 주민들의 반감이 극

심했다. 그들은 “연합뉴스 기사는 기사도 아니다. 언론도 아니다” “꺼져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욕설까지 왔다. 또 “연합 기자는 커피도 마시지 마라”라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빼앗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때 서울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촬영하려 갔는데 시민들이 “너희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정부 찌라시는 꺼져라”라며 언성을 높였다. 일부 시민들이 촬영가

지방해해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부산 희망버스 현장,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 등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면서 연합뉴스 로고를 떼고 촬영을 해야만 했던 수모를 동료 기자들이 겪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우리가 배운 연합뉴스의 기본은 어느 취재현장에 가더라도 “연합만은 사실을 공평하고 빠르게 보도한다”라

는 평가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연합의 보도가 불편부당했다면 그 취재현장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관계 없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다.

박 사장은 일선 취재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연합뉴스의 굴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인가. 아니면 극소수 ‘전문 시위꾼’이나 정파 인사들의 과격성으로 치부할 텐가.

“나는 ‘연합찌라시’에 다니지 않는다”

9일 금요일 밤 연합뉴스 직원들이 하나 둘 종로 보신각 앞에 모였습니다.

낮에 좀 풀리나 싶었던 날씨가 해가 지면서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지만 손에 든 촛불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온기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촛불을 든 옆자리 동료도 그렇게 든 든할 수 없었습니다.

“파업이 확실시되는 노조에 노조원이 새로 100명 늘어난 경우는 처음 봤다”고 어느 노무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동료의 단체 울동에 깔깔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쓴 기사에 ‘연합찌라시’ 기자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는 연합찌라시가 아

니라 연합뉴스에 다닙니다”

막내 조합원의 외침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린 직장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한 인권운동가는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라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라 제 역할을 포기한 데 대한 용서가 먼저 일테니까요.

신기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촛불은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도 찬바람을 잘도 견뎌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찌라시는 약하지만 연합뉴스는 강합니다.

우리는 촛불처럼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기어코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